

부위원장 모두발언

2017. 3. 6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1 인사 말씀

- ☐ 안녕하십니까.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정은보입니다.
 -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관계 기관장님과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
- ☐ 정부는 그동안 금융회사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와 채무자에 대한 원활한 재기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음
 -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은 민간금융회사 뿐만 아니라, 서민과 정책 금융을 담당하는 금융공공기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임
- ☐ 오늘 간담회는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들을 살펴보고,
 - 향후 현장에서 개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마련하였음

2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현황 및 평가

- 금융위원회 소관 6개 금융공공기관*의 부실채권 규모는 '16년말 현재 약 25조원**이며, 이와 관련된 채무자는 무려 70만명에 달함

* 주금공, 신보, 기보, 농신보, 예금보험공사, 자산관리공사

** 가게 및 개인사업자의 부실채권

- 이는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부실채권(가계 부실채권 약 40조원 수준)과 비교해서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며,
-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대상이 주로 서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,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는 우리경제에 매우 중요한 과제임
-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

① 첫째, 부실채권은 오랫동안 보유할 것이 아니라, “신속히 조정하고 정리”해야 할 대상임

- 상환능력과 재산이 있어 회수가 가능한 채권은 신속하게 회수하여야 하며,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과감히 정리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함

② 둘째, 단기적인 회수 실적의 증대 못지않게,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이 중요함

- 채무자가 재기에 성공할 때, 장기적으로 회수 실적이 제고될 수 있으며, 국민경제의 선순환도 가능함

③ 셋째, 다중채무자의 경우, 개별적인 채무조정이나 채권관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“채무자”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

-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, 현재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 방식은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에 미흡하고, 관리상 비효율도 적지 않다고 생각함

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은 연체 후 평균 10년 이상* 경과된 채권으로,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적기에 정리하지 못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

* 민간금융회사는 통상 연체 후 1년 이내에 상각하여 정리

② 금융회사와 달리 상환여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해서도 원금감면을 허용하지 않는 등 경직적인 채무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실질적인 재기 지원에 한계

③ 기관별로 대손상각, 채무조정 등 채권관리 방식이 상이하여 다중채무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채무조정을 하기 어렵고, 채무자간 형평성도 저해되는 문제

3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

-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부실채권 관리의 중심을 “형식적인 회수와 보유”에서 “적극적인 조정과 정리”로 전환하여,
 -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도모하는 한편, 각 기관은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
- 이를 위해 3가지 방향의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음
 - ① 첫째, 대손상각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회수 가능성이 없는 부실채권은 적기에 상각토록 하고,
 - 상각된 채권은 부실채권 관리의 전문기관인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고 일원화하여 관리
 - ② 둘째, 채무조정, 추심회수, 시효관리 등 채권관리 과정별로 각 기관이 운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여 채무자 재기 지원을 강화
 - 채무조정 절차 개선과 내용 강화 등을 통해 기관 자율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
 -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원금부터 우선 변제하여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는 한편,
 - 취약계층에 대한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과 시효완성시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·안내 추진

- ③ 셋째, 직원 면책근거 마련, 채무조정 성과 반영 등 채권관리와 관련된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채권 통계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도 병행할 계획임

4 맺음말

-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채무자의 재기 지원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고민에서 마련되었음
-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 여러분의 리더십이 중요함
 - 특히, 핵심 과제인 상각채권 일원화 관리는 금융공공기관간의 상호 긴밀한 협조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
- 오늘 간담회에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, 기관간 상호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함
감사합니다.